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10.12~14)

1. WTO 양자간 협의 결과 관련

□ [동향]

- NHK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관련, 양국 정부가 WTO 절차에 따라 양자간 협의를 실시한 결과, 일본이 (동 조치가) 안전보장상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한 것과는 달리 한국 측은 WTO 규범 위반이라는 주장을 양보하지 않아 평행선인 채로 끝났다고 보도¹⁾
- o 한편 한일 양국은 다시 협의를 실시하는 방안에 동의

□ [일본 정부 동향]

- 첫 번째 WTO 협의 후 경제산업성의 구로다(黒田) 통상기구부장은 “실제로 한국 측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3개 소재의 수출관리를 보다 적절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고 하였음.²⁾
- o 한편 구로다 부장은 한일 양국이 서로 양보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예단해서 발언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 고 함.³⁾
- 일본 경제산업성은 WTO 양자협의 내용과 관련, 한국 측의 무역관리 운용 및 체제의 취약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배경 설명에 더해 개별허가 대상 3개 소재에 대해 △ 수출관리상의 책임 △ 짧은 납기기간 △ 부적절한 사안의 발생 등 3가지 관점에서 수출관리를 보다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설명했다고 보도⁴⁾
- o 첫째, 일본이 이들 3개 소재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출

1) 「日韓兩政府 輸出管理めぐるWTO協議 平行線で再度協議へ」 『NHK NEWS WEB』 (2019. 10. 12).

2) 각주 1의 NHK와 동일 출처

3) 「輸出管理強化 日韓、再協議へ WTO主張に隔たり」 『産経新聞』 (2019. 10. 12).

4) 経済産業省(2019. 10. 12) 「大韓民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についてWTO協定に基づく二国間協議を実施しました」. 홈페이지: <https://www.meti.go.jp/press/2019/10/20191012001/20191012001.html> (접속일: 2019. 10. 12)

관리 책임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

- 둘째, 사용자로부터 짧은 납기 기간 내에 공급해 줄 것을 요구받기 때문에 수출업자의 수출관리가 부적절하게 될 경향이 있다는 점
- 셋째, 실제로 수출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는 점
 - 이에 더해 경제산업성은 민간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이 확인되어 군사전용 우려가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허가를 주고 있어서 애초에 금수조치가 아니며, 한국 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보도
 - 스가와라(菅原) 경제산업성 장관은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과도 정합적이라는 일본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제대로 국제사회에 알리고 싶다”고 발언⁵⁾
- 모테기(茂木) 외무장관도 10월 11일 기자회견에서 WTO 양자협약과 관련, “일본의 조치는 WTO 협정과도 정합적이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고 싶다”고 발언함.⁶⁾
- * WTO 협정과 정합적인 이유와 관련하여 산케이 신문은 ① WTO 협정은 안전보장을 이유로 무역제한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 ② 개별허가 심사를 통과한 제품(안전)은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실적도 있다는 점 등을 들었음.⁷⁾

□ [일본 언론 동향]

- 일본 주요 언론들은 첫 번째 협의가 평행선을 달렸다고 하면서, 한일 양국의 견해 및 입장의 간극이 커서 대립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⁸⁾

5) 「対韓輸出規制：輸出規制強化の日韓協議始まる WTO提訴受け」 『毎日新聞』(2019. 10. 12).

6) 外務省(2019. 10. 11), 「茂木外務大臣会見記録」.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press/kaiken/kaiken4_000879.html#topic3 (검색일: 2019. 10. 14).

7) 「日韓対立 長期戦に WTOは機能不全恐れ」 『産経新聞』(2019. 10. 13).

8) 「輸出規制巡り、日韓協議開始 WTO」 『朝日新聞』(2019. 10. 12) 및 「日韓、輸出規制巡り協議 隔たり大きく半導体材料 WTO手続き」 『静岡新聞』(2019. 10. 12). 및 「輸出管理強化 日韓、再協議へ WTO主張に隔た

- 한편 산케이 신문은 양자간 협의가 패널 심의로 넘어갈 공산이 크며, WTO 상급위원회의 위원수 부족으로 신규 안건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론이 나지 않을 우려조차 있다고 전망⁹⁾
- * WTO 상급위원회의 정원은 7명이지만, WTO에 불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위원의 재임 및 보충을 거부하고 있어서 현재 최저 정족수인 3인만 있는 상황임. 12월에는 3명중 2명의 임기가 만료됨.

2. 한일 관계 관련

□ [일본 동향]

- 일본 자민당의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전 관방장관은 현재 상황을 타개하려면 “일본 측 입장에 대한 이해를 구한 다음, 언젠가 양국이 정상회담에 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고 주장¹⁰⁾
- 또한 11월 1일 예정된 한일의원연맹 총회에서 솔직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발언하면서, 현재 상황이 적어도 민간교류, 문화, 스포츠 교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
- 일본 동경공업대학교 나카지마 다케시(中島岳志) 교수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확산을 한일 양국에서 발생한 3가지 요인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타입의 현상이라고 주장¹¹⁾
- 나카지마 교수가 주장하는 3가지 요인이란 일본에서 20~30대 시기에 전쟁을 경험하여 전시체제를 싫어한 언론인의 퇴장, 1982년 나카소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등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이 정치문제화 된 것, 1987년 이후 한국의 민주화임.
- 단, 1987년 이후 한겨레 신문과 같은 진보계 언론이 위안부 문제 등을 거

9) 『産経新聞』(2019. 10. 12). 및 「日韓WTO協議、初回は平行線。」 『日本経済新聞』(2019. 10. 12).

9) 각주 7의 산케이신문과 동일 출처

10) 「(「隣人 日本からの視線：2) 現状打開、首脳会談しかない 河村建夫さん」 『朝日新聞』(2019. 10. 12).

11) 「(「隣人 日本からの視線：4) 異論拒む姿勢、保守とは言えない 中島岳志さん」 『朝日新聞』(2019. 10. 14).

론하는 등 이 3가지 요인이 맞물렸을 때에도 아직 강한 ‘협한’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 이후 한국이 경제성장으로 국력을 키우는 한편, 일본의 상대적 지위가 내려간 점, 그 이후 “일본에 말할 것은 말한다”라고 한국의 자세가 변화한 점이 일부 일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특히 고령 세대일수록 그 경향이 잘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평가

- 한편 나카지마 교수는 한국 정부와 관련,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전제가 결여된 것처럼 보인다”고 논평

3. 강제징용 판결 관련

□ [일본 전문가 동향]

- 일본 고베대학원 다마다 다이(玉田大) 국제법 교수는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하여 한일 양국 정부 주장에 약점이 있으며,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¹²⁾
- 일본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한국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동의해도 일본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 * 국제사법재판소는 심리에서 식민지 통치의 위법 여부를 다루지 않을 수 없음. 식민지 통치가 부정되기 시작한 것은 국제연맹 체제 이후이기 때문에, 다마다 교수는 1910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위법성을 논하는 것은 법의 원칙에는 어긋난다고 주장.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인권이 보다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재판관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
 - * 또한 일본이 역으로 2005년에 한국 정부가 제시한 ‘협정의 대상 범위에 관한 판단’을 내밀어도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국가 간 조약의 적용 및 해석을 규정한 빈 조약법 조약은 기체결된 문서를 보다 중시하기 때문임.

12) 「徴用工、こじれる日韓」 『朝日新聞』(2019. 10. 11).

- 한편 국가간에는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삼권 분립 하에서 정부는 사법에 개입할 수 없다” 는 주장도 무리가 있다고 논평

4. 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

□ [일본 정부 동향]

- 아베(安倍) 총리는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한국에 대해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 고 하였으며, “한국이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고 발언¹³⁾

13) 「首相「韓国は賢明な判断を」、軍事協定破棄巡り、衆院予算委。」 『日本経済新聞』 (2019. 10. 12).